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지난 20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수축산업, 기업유치 등 도정 핵심 시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 제공>

# 제2청사 대신 출장소 직급 상향 동부권 출신자 전진배치 가능성

## 이낙연 당선자 '동부권 배려' 관심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동부권 배려'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한 동부출장소의 증설과 향후 단행될 인사에서 동부권 출신들의 중용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의 남악 이전과 함께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설치된 전남도청 동부출장소는 4급 서기관을 소장으로, 관리·산업경제·환경관리 등 3개 담당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한정된 민원만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부권에 제2청사를 설립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 처리 비중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전행정부가 인구 800만명 이상일 경우에만 제2청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재는 경기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구 200만명

도 안 되는 전남도는 제2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동부출장소라는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4급(서기관) 대신 3급(부이사관)으로 동부출장소장의 직급을 격상하거나 개방직으로 바꿔 동부권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이 당선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만큼 동부권 출신 직원들의 전진 배치도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9일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등 조직개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조직개편에서 동부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부시장·부지사·비서실장 인선, 외부인사 영입 폭 최대관심

## 광주시·전남도 민선6기 인사 시작

민선 6기 광주시의 첫 인사 원칙 등이 이르면 24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는 전남도 역시 인사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정 직책에 외부 인사들의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함께 새로운 광주시정을 함께 이끌 정무직 부시장과 비서실장의 인선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상 준비위)'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선 6기 첫 인사원칙과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첫 인사 대상인 정무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도 내달 1일 취임식을 앞둔 만큼 이번 주 내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정 안팎에서는 정무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을 놓고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준비위 내부에서는 우선 정무직인 현 경제부시장을 현재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대신 정무 또는 문화, 환경 등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먼저 신임 시장의 취임과 함께 정무나 문화 등으로 바뀌 출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시민 복지를 우선시하는 윤 당선자의 코드를 고려하면 역시 경제부시장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많다. 자신이 직접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통하는 윤 당선자의 성격상 부시장까지 정무직으로 두면 자연히 경제 분야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만일 정무 기능이 부족하다면 비서실장이나 시민 특보 등의 분야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다.

현재 정무직 부시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송인성 준비위 위원장을 비롯한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이해명 누리문화재단 이사장,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 정찬용 전 참여정부 인사수석 등이다. 그러나 정무직을 경제부시장으로 할 경우 경제 전문 관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비서실장으로는 김능재 준비위 행정지원단장과 서대석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 비서관,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 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등이 자

## 市, 특정인사 이름 거론 '어수선' 내일 원칙·방향 등 '밑그림' 발표 도, 인수위 인사 도정참여 예상 외부 영입 무리수는 두지 않을 듯

전타전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준비위측에서는 공식 해명을 통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거론되는 말 자체가 터무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이낙연 당선자가 '인물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지사는 외부 인사로 채워질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와의 교감에 가능한 내부 인사의 중용이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 비서실장은 모두 공직자였다. 이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릴 때 공보팀, 정책지원팀, 비서팀 등 지원조직의 구성원을 직접 인선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정 참여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대변인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민원실장도 공직이어서 취임 즉시 인사도 가능하다. 직제 개편 전에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인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스타일과 지금까지의 언급을 고려하면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빼앗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사회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외부 인사 영입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혁신 도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경제부지사의 인선에는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호'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 당선자가 직접 주변에 적당한 인물의 추천을 부탁했으나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

전남도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가 직접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선 6기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후보자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ha Trang**

여왕의 휴식을 꿈꿔본 적 있다  
나에게 하는 선물은 수익 좋은 투자다  
당당함이 단단함은 아니다

정글 같은 일상에서  
잠시 로그아웃을 꿈꾸는 당신은

**C1** 당신에게 바다 위에서 누리는 여왕의 휴식을 추천합니다  
[바다 위의 낙원 나트랑 힐링투어]

누구나 전미다의 여행이 있다  
베트남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호환인, 허노이, 다낭, 나트랑 /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찾아보세요 당신만의 여행을  
travel.koreanair.com

## 광주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838명 정규직화 기대

### 인수위 "기관 특수성·예산·경영합리화 등 검토해 결정"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이 8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을 지시한 이후 나온 공식 집계로, 기관별 비정규직수에 대해서는 '공개되면 불편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과의 소통'을 기치로 내건 윤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정 행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2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국에서 가장 앞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98명 중 법률상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45명을 제외하고 53명을 민선 5기 정규직화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면서 "(시)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850명의 비정규직 중 12명을 정규직화해 838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민선 6기 인수위원회인)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서 밝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정규직화는 각 기관의 특수성과 예산확보 대책, 경영합리화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산하 비정규직 838명을 중심으로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다만 각 기관별 비정규직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안된다. 공사·공단 4곳 568명, 그외 270명 등까지만 밝힐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기관별 비정규직 비교를 통한 비판 여론 형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지난 19일 오전 준비위 회의에서 광주시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취임 초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